

의안 번호	1936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25.(금)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3. 25.(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4. 6.(수)

2. 제안설명 요지(건설과장 박정호)

가. 제안이유

-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물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외 납부방법 내용 신설(안 제18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9조 ~ 제20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내용 정비(안 제22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 「지방자치법」 제57조
-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 권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하성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

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물 환경 관련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 - 673호

① 법령상 근거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②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③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④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⑤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